

경찰 “조회·인증 유도 의심해야”...선택배 문자주의보

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 예방 방법 안내 문자로 악성앱 설치 유도한 뒤 기관 사칭 사칭 광고·가짜 정보로 투자 유도 뒤 잠적 원금·수익 보장한다며 투자 받아 돌려막기

경찰청은 30일 오는 설 연휴에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주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설명하며 가족들과 공유하기를 당부했다. 우선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택배·부고장·건강보험공단 등 미끼 문자를 보낸 뒤 이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조회나 인증 등을 요구하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연락처·사진·촬영 및 녹음 기능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범인들은 주로 확보한 개인정보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사에 협조하라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누를 때 주의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은 구속한다며 협박하거나 전화로

협박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없고 구속영장·공문 등을 SNS로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야겠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 등 공인 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나 주의해야겠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광고나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들이 현혹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단체채팅방 등에 참여하면 바람잡이를 이용해 범인들이 만든 가짜 홈페이지(HTS)에 접속하게 하고, 가짜 HTS 상에서 본인들이 추천한 종목이 급등하는 것처럼 속인다.

피해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경우 일부 수

익금을 지급해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일정액 이상의 거액을 투자할 경우 잠적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투자리딩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SNS 단체채팅방 등에 수백명이 있더라도 대부분 바람잡이이므로 주의하고 일부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유사수신 및 다단계 투자사기는 ‘돌려막기’라고 불리는 폰지사기 형태로 이뤄진다. 폰지사기는 수익을 낼 수단 없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이들의 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으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액으로 상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범인들은 일정 수준 목표액이 모이거나 신규 투자자가 더 이상 모집되지 않는 등 범

행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 오면 잠적하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피해를 알고 신고한다.

다단계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고 비밀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 모두 사기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면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 등을 통해 투자하지 제3자에게 접근해 투자받을 일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설 연휴에 가족, 친지, 친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관련 기사나 영상을 공유하여 개개인의 범죄예방 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청해달라”며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 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순욱기자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앞에서 열린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언론 죽이기-정치보복적 심의 자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어용노조 의혹 시립제1요양병원 압수수색

어용노조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등에 특사경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수탁 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이 병원내 어용노조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노동청은 병원을 비롯, 병원장과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

본부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의 어용노조 운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어용 노조의 설립 과정과 경과 등을 공개하며 “위탁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시는 그동안 노동조합에 귀를 닫고, 의료재단 측 불법 행위를 방조한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제라도 해당 재단에 대한 수탁계약을 취소하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시의 책임과 역할에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약속은 반복될 것”이라며 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수권기자

광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 업체에 과태료 300만원 물린다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과대포장 업체 집중 점검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 과대포장 업체를 집중점검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목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이다.

포장 횟수를 초과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지 지나친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가 검사결과에 따라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

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윤일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유통 단계뿐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판매자와 시민 모두 과대포장 억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민기자

광주 보육교사노조 “일방적 해고 중단, 고용 보장하라”

광주 보육 대체교사 노조가 기간제 보육 대체교사들을 해고하고 비담임교사를 확대 채용하려는 광주시 방침에 반발,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차 합의를 파기하고 보육 대체교사들을 대량 해고하기로 한 광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는 지난해 8월 보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자며 구성된 4차 합의(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시사회서비스원·노조)를 무시, 계약 만료를 앞둔 보육대체교사 62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며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사실상 전원 해고안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광주시는 광주시어린이집 연합회의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 서명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며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비담임교사 채용을 확대한다는 것은 보육 공백이 더 커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전체 884곳 어린이집 중 비담임교사를 100곳에 투입, 관련 예산의 55%를 할당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보육 대체교사 파견을 200곳으로 제한했다”며 “교사 파견이 안되는 어린이집 584곳은 단시간 노동자인 보조·연장전담반 보육교사가 초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를 향해 보육대체교사 해고 중단·고용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근무를 통해 보육 공백을 메꿔야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비담임교사는 담임교사의 휴게·업무 일부 대행을 위해 채용되나 대부분이 지원 목적과 근무 특성에 어긋나는 보육 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광주시의 결정은 민간이유집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정책은 숫자놀음 허구”라며 “보육 대체교사 해고를 중단, 고용을 확대·보장해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초부터 8월 말까지 220일 넘도록 계약 만료 이후 고용 보장을 촉구해 오며 광주시청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노조는 225일 만인 같은 해 8월 25일 광주시와 비정규직 고용 등 해법 마련을 위한 전달 담 부서 구성에 합의하면서 농성을 중단한 바 있다. 이슬비기자

“아이들도 먹는데”...‘발기부전치료제’ 섞은 수입꿀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 벌꿀을 수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수입산 벌꿀을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

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하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